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국가기밀이 담긴 USB, 몰래 넘기면 간첩이고 대놓고 넘기면 통치행위란 말인가?

1. 전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독대 후, 판문점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있다는 USB를 건네줬다. 도보다리 회담에서의 문재인의 입모양을 분석한 결과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해 “신경제 구상을 (중략)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고, 산업부는 며칠 뒤인 2018년 5월초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고,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며 원전 관련 메시지를 냈다. 모든 것이 의문스럽다.
2.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국가 고유의 노하우이자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를 탐지·수집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며, 북한은 대법원이 수차례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신경제구상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면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번 대변인의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은 2022. 8. 17.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USB 내용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강제수사밖에 없다.
3.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작년 5월 문재인과 윤건영(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에 대해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북으로 넘어간 USB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고,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계류중이다. 판문점 USB 사건은 문재인 개인의 비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넓게는 21세기 전세계 이념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에 한번은 서울중앙지검이 USB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2.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